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 노 대통령 발언 요약

- 남북기본합의서 관련

북측이 남북기본합의서 얘기를 싫어한다는 데 이해가 안 갔는데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르더라. 우리측이 이행을 안 했다고 생각하더라. 같은 문제에 대해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 ‘화해’ 의 문제

화해한 후에 협력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화해 문제는 영원히 안 풀리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본질적 화해는 기본적으로 지난날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의 특성상 영원히 극복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 화해 없이 교류 협력하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모순이다.

- ‘인민’ 에 대한 표현 (* 참석자의 질문에 대해)

거기 가서 ‘국민’ 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국민들의 업적인데, ‘국민들은 위대하다’ 고 쓰려니까 어색하지 않나? 만수대 의사당에서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 이라고 썼는데 우리 기준의 덕담으로 쓴 것이다.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최고의 가치고, 국민을 위한 주권의 전당이여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내 나름대로 쓴 것이다.

- **핵 문제** (*참석자 발언에 대해)

핵 문제는 우리는 표현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 같다. 핵 폐기 과정에 대해 저는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 이미 이행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문제를 보았다. 그리고 정상회담시 서두에서 그쪽에서 우리는 핵을 가질 의지가 없다면서 6자회담 대표(김계관)를 불러서 과정을 설명까지 해 주는데, 핵폐기를 확인해 달라는 부분을 한 줄 더 넣자는 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긴 시간 논의하는 것이 회담 전략상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9.19 선언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

- **NLL 문제** (*참석자 발언에 대해)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걸 오늘에 와서 ‘영토선’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다. 국민들을 오도하면 여간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는 것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 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이다.

- **경협 비용 문제 (*참석자 발언에 대해)**

지원을 하든 투자를 하든 북측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결정한 것(선언)은 남쪽의 이익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철도·도로는 지원 성격이 될 수도 있고 투자의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개성까지의 철도는 우리 필요가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만 멀리 보면 평양, 신의주까지의 철도는 중국과의 물류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일이다. 현재 합의된 것은 공동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것을 일방적 투자나 지원이라고 말한다면 깊이 따져 보지 않은 말이다. 공동의 이익,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 **‘경제권’ 관련**

북의 생필품이 80%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그 대가가 북의 자원으로 나간다. 북한과의 물류선은 경제권과 직결되는 것이다. 중국도 이미 평양까지 도로 개설을 제안해 놓고 있다. 경제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북측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된다.

- **국군포로, 납북자를 이산가족 틀에서 해결하는 문제 (*한 참석자가 건의)**

이산가족 처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민심이 그걸 구분해서 표시해 주길 바라는 데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이산가족이란 큰 틀에서 묶어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해 보라고 사실상 정치적 위임을 해 주면,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국민 부담 문제**

국민 부담 문제는, 절차로 예산 편성 과정과 개별 보고과정에서 사전 사후

통제가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사전 동의는 국회가 요구하면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국회의 동의 받을 성격이다 아니다. 국회에서 각당 대표들께서 논의를 모아서 스스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 종전선언 문제

종전선언의 문제는 평화체제로 가는 첫 단계 문을 여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국이 당사자로서 인정받으려는 부분을 국제적인 합의 속에서 끌고 가려고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 관련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동의 마지막에 북의 확인을 받은 것이다. 그런 의미 있는 결과다. 다만 실제 선언을 언제 할 거냐는 노력을 해 가야 할 문제지만, 6자회담의 이행 속도에 따라서 가야 할 문제고, 이 선언이 6자회담, 북핵 폐기의 속도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경제협력의 중요성

경제협력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논리상 핵, 평화 문제보다 경제가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핵과 평화문제를 푸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선순환 과정으로 가도록 잘 조정해야 하는 것이 경제협력의 전략이다.

- 미래지향적 투자 개념

우리가 중국 베트남에 투자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투자이고, 이익이 돌아오는 투자만 있을 뿐이라고 봐야 한다.

- 상대방 인정

상대방이 옳으면 대화하고 그르면 대화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다. 미우나 고우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대라는 점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 말이 통할 때만 협력하고 안 통하면 협력 안 하기도 쉽지 않은 처지이기에,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를 구축해온 덕분이다.